

현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쟁점은

# “언론인·사립교원 대상 적용은 사적 영역 침해”

## 배우자 신고 조항·민간 규제 등 4대 쟁점 주목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는 9월28일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의 결정은 이 법 시행 두 달을 앞둔 시점에 기업은 물론 경찰까지 나서서 ‘김영란법 대응 TF’를 꾸리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등에서도 현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현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리해 왔다.

쟁점은 크게 네 부분으로 정리된다. 현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법 2조 1호 라,마,목·2호 다,라)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한다. 또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다른 공적 영역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를 침해할 만큼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국

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법 9조 1항 2호,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주요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법 5조 1항, 2항 7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협뉴스

## 추경안 제출 앞 국회 ‘전운’

### 누리 예산 최대 쟁점...與 처리 압박에 野 “심사는 제대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둔 25일 여야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심사와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간간히 들여다보는 ‘현미경 심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추경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애초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내세웠지만 한발 물러서 내년 예산안과 연계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여기에 일단은 국민의당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에 연계시키는 건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대치하는 형국이지만 더민주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도 일단은 더민주와 공동선을 펴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전반적으로 연계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표시하고 있어 공조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더민주 내부에서도 출구 전략이 물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입장을 바꿀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국을 파행으로 이끌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새누리 본격 전대 모드

### 29일 후보자 등록...안갯속 판세 속 김문수 출마 관심

새누리당은 25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8·9 전당대회에 세부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2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5, 26일 이틀간 선거인단 명부를 검토하고 28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대 선거인단은 지난 2014년 7·14 전대의 20만4000여명보다 14만명 가까이 늘어난 34만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일과 함께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이어 29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의 후보등록을 마감하면 최종 대진표가 확정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29일부

터 9일까지 12일간이며 이 기간 중 합동 연설회와 TV토론이 열린다.

이날까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이주영·정병국(5선), 주호영·한선교(4선), 김용태·이정현(3선) 의원까지 6명이다. 여기에 홍문종(4선)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에서 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출마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으로는 강석호·조원진(3선), 이은재·이장우·정용기·함진규(재선), 최연혜(초선) 의원, 정문헌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재충전은 관저에서...박대통령 여름휴가

### 개각·광복절 사면 등 현안 구상...SNS 메시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여름 휴가를 맞아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다. 박 대통령은 지방은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한편 밀린 서류를 보면서 국정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날 “관례에 따라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묵묵히 국정을 챙겨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에 대한 해법과 함께 노동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안, 개각 및 8·15 광복절 사면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이 기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는 물론 與 비박이여 친박까지 공세...‘사면초가’ 우병우

### 靑 민정수석 사퇴 압박

야권은 25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일제히 요구하며 총공세를 나섰다. 이번 주 여름 휴가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에 개각에 앞서 우 수석의 거취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 수석은 대통령이 휴가 기간 구상을 내놓기 전에 먼저 본인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예의”라며 “본인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 수석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또 “전 국민이 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데 오직 청와대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못 느끼고 있다”면서 “레입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계속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특검발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조속한 진상 규



더민주 “백남기 사태 책임자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태 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 원내대표, 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씨, 정현찬 대책위 대표, 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씨, 막내딸 백민주씨와 손자 지오군. /연협뉴스

명을 요구하면서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비박계에서는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우 수석의 사퇴 불가피론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에서도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부·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솔직히 말해서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다”면서도 “의혹 규명이 우선돼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잘못이 없다면 그 뒤부터는 새로운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수위 조절을 했다.

그러나 비박(비박근혜)계 당권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에게서 구설수가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으면 일단 물러나서 하는 게 옳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다른 비박계 당권주자인 김용태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무엇이 정말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사실상 사퇴에 방점을 뒀다. /임동욱기자 tuim@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